

[르포]거리에서 사채 전단지가 사라진 까닭은?

등록 2012.05.30 10:28:15 | 수정 2016.12.28 00:44:28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지난 29일 밤 10시. 유흥가가 밀집한 청주시 하북대 지역.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오가는 취객 사이로 달라진 풍경이 눈에 확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명함 크기의 사채 전단지로 도로 바닥이 도배됐던 거리가 깨끗해진 것이다. 성안일과 충북대 정문 앞, 금천동 광장도 마찬가지로 말끔해졌다.

기자가 2시간여 동안 청주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 '전화하면 즉시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대출 OK' 등 문구로 사채를 권유하는 전단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낮에도 마찬가지로 청주지역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꽂혀 있던 '사채 사용을 권유하는' 전단지가 사라졌다.

하북대 지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전모(43)씨는 기자에게 "불과 4월 초순까지 건물 계단을 비롯해 가게 입구, 도로 등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던 명함 크기의 사채 전단지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모충동에 거주하는 이모(53·여)씨는 "낮에 가게 앞에 앉아있으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사채와 관련된 명함을 연신 배포하는 장면을 수없이 봤는데 요즘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채 전단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덕분이다.

정부는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지난 4월18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경찰청도 전담팀을 편성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이 중 미등록대부업자는 114명, 이자율제한 위반 23명, 불법채권추심 35명, 유사수신행위 등 기타 13명 등이다.

실제 청주청남경찰서는 최근 육거리 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상인을 상대로 연 500%의 이자를 받은 유모(51)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20일부터 지난 3월 초순까지 육거리시장 내 김모(70)씨 등 노점상 4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5000만원을 받는 등 연 60%~512%의 이자를 갈취한 혐의다.

유씨는 또 김씨 등에게 "딸과 마누라를 넘기라"며 흥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령인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채소를 팔아도 원금을 갚지 못하자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일단 악덕 사채업자 근절을 위해 이번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성과를 평가한 뒤 각 경찰서별로 2차단속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를 뿌리뽑기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swpark@newsis.com